

새해부터 배달료 인상…소비자·자영업자 부담 커지나

1km 기준 기본료 500원·악천후 시 300원 추가

업주 “납는 수익 없어”…업체 “라이더 영입·유지”

“추워서, 더워서, 공휴일이라서 갖가지 이유로 마음대로 배달 할증을 붙이는 데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대체 업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3년째 닭발집을 운영 중인 이 모씨 (49)는 배달업체로부터 새해에는 기본 배달료 500원 인상에 눈·비 등 악천후 시 할증료 300원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통보받았다.

이씨가 이용하는 업체의 현재 기본요금

은 1km당 3,500원.

야간장사를 주로 하는 이모씨의 경우 새벽 12시 이후 날씨 할증까지 더하면 기본 요금은 4,600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월 관리비 10만원은 별도다.

이씨는 “2만원도 안 되는 음식 하나를 팔고 배달료가 30% 가까이 나가니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료 할증’이

또 다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 여파로 배달 매출이 장사에 주가 된 상황에서 날씨와 공휴일 등 갖은 명목으로 추가되는 할증 비용에 업주들의 부담은 날이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지역 배달업체와 이용 업주들에 따르면 업체별로 배달료가 각각 상이하지만, 평균 기본료 3,300~3,500원에 1km의 거리를 배달한다.

추가 거리 100m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며, 동을 넘어가면 시외요금처럼 500원의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

여기에는 새해부터는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에서 배달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라이더들이 일을 관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라이더 모시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서구에서 셀러드 가게를 개업한 업주 최 모씨 (31)는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업주가 배달팁을 설정하는데, 경쟁업체도 있고 주변 상권과 소비자도 생각해야 해 무조건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며 “예를 들어 배달팁을 3,300원 받아야 본전이라면 2,000원을 받는다. 건당 1,500원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주들은 코로나 사태에 배달료 인상까지 겹쳐 영업난에 시달리면서도 별

도리가 없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오른 비용만큼 음식값을 올리면 매출이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대형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할증료를 받고 배달료를 올리다 보니 라이더를 영입·유지하기 위해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서 소득세 납부로 인한 기본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대행업체 업주 김 모씨 (34)는 “대

형 플랫폼 업체에서 배달료를 많이 줘버리니까 라이더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 배달료를 더 줄 수밖에 없다”며 “새해부터는 세금으로 수익구조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타 업체들과 동일하게 금액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배달 업계의 구조와 배달료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를 마련하고 체계를 잡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미접종자 1인 이용도 안돼

종교시설은 적용대상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장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백화점과 마트를 포함했지만, 사실상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2월에서 한 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

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며,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강제로 일상생활을 막는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PCR 없이는 미접종자 1인 이용마저도 허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면서 시설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거주하는 김 모씨 (61)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 불안감 때문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백화점과 마트로 확대한 것은 차별을 넘어 보건자료 치부하는 거 같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유린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인해 극적인 확진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 시설에 많은 사람이 밀집할 때 방역상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위험성이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금당산의 첫 일출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1일 오전 광주 금당산을 찾은 시민들이 올해 첫 해돋이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광주 경찰이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관내 음주 교통사고는 총 374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도 3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7%가량 줄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을 집중해 음주 운전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사이드카, 기동대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한다.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 야간(전·후반), 심야시간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면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음주가 의심되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해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환준 기자

서대석 서구청장 코로나 확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 청장은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 청장은 지난날 27일 장항금 기탁 행

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틀 뒤인 29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수동감시에 들어갔고, 추가 검사에서 확진됐다.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을 완료한 서 청장은 델타 변이형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서 청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다음 날인 28일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이 모인 회

부 행사에 참석했다.

방역 당국은 그 이튿날 1차 검사에서 청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른 구청장들이 추가 확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서 청장이 확진되자 서구 비서실 소속 직원 3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홍승현 기자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종 치료
초음파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도입

대표전화: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70번길 10(두암동)

고객센터 1811-7474 <https://hosp.chosun.ac.kr>
권역응급의료센터 220-3119 종합건강증진센터 220-3030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길라잡이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의료광고심의결 제2009901-증-11689호]